아동학대 제대로 못 막는 아동학대방지법

전담경찰 광주 16명·전남 36명…경찰 1명이 시·군 전체 관리도
광주·전남 보호 쉼터 11곳 불과…피해 아동 즉각 분리조치 안돼

만 3세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4세 입양아를 학대한 양부모(養父母)사건〈광주일보 11월 4일 6면〉과 관련, 아동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형식적인 대처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분하지 못한 광주·전남지역 학대예방경찰관(APO) 인력 문제와 학대 아동 보호 시설 등 부족한 인프라도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 1명이 시·군 전체 학대 아동 살피기도=8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모두 53명(광주 16명·전남37명)이다.

광주의 경우 광주경찰청 2명, 동부·남부경찰 각 2명, 서부·광산경찰 각 3명, 북부경찰 4명이다.

전남은 전남경찰청 2명, 목포·여수 각4명, 순천 3명, 광양·보성·영광·함평·장성·담양 각 2명의 전담 경찰관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고흥·해남·무안·장흥·화순·영암·강진·곡성·완도·진도·구례 등 11곳 경찰서의 경우 1명이 지역 전체 아동학대 사건 관련 피해자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니 무관심할 수 밖에=올해 10월까지 광주지역에서 112로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541건, 전남은 635건. 산술적으로만 보면 광주지역 APO 한 명 당 33.8건, 전남은 17.1건을 담당해야 하는 셈이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조사에 들어간다. 전담 경찰의 경우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고 필요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에 조사결과 통지 등 아동 학대 현장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수사 뿐 아니라 재발 우려가정·학대우려아동을 매달 한 차례 이상 모니터링까지 해야 한다.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직접 찾아가 만나보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지만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또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신고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까지 맡아야 한다.

매뉴얼대로 할 시간도 버거운 상황에서 학대 아동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다. 결국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만 3세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4세 입양아를 학대한 양부모 사건에서도 경찰은 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한 긴급 임시조치 등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학대 사실이 드러난 4세 입양아를 양부모로부터 즉각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도 가능했지만 경찰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1년에 2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거나 강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해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경찰은 이미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경우 규정상 모니터링 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했고,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추가 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지난 9월 자치단체에 의견을 내놓으면서 지난 9월에야 피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할 수 있었다. 검찰도 1년 넘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양모를 구속한 지난 4월에야 지자체에 아동 분리 조치 등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으로만 강화하면서 인력·예산 지원 등을 통한 관심은 두지 않다보니 기존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동쉼터도 부족해=학대아동 일시보호시설 부족 문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때까지 아이들을 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광주 2곳, 전남 9곳 등 총 11곳 뿐이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이 생활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지난 9월 분리 조치 된 아동도 광주지역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 중이다.

광주에는 동구와 서구 각 1곳(각 정원 7명)의 쉼터가 운영중이지만 현재 정원이 가득찬 상태다.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지만 더딘 형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광주시는 쉼터 이외에 단기 일시 보호소 1곳(정원 7명, 현재 입소자 0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올해 12월까지 2곳의 쉼터를 더 열어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은 광양 2곳(각 정원 5명)만 빼고 목포·나주 2곳, 순천·여수·해남 1곳은 7명의 정원으로 총 9곳이 운영되고 총 정원 59명에서 35명이 입소해 있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단순히 '매뉴얼만대로 했다'라는 식의 조치 보다는 자신의 가족이라는 생각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역정치권 근거없는 소문 무성
경찰, 선거사범 본격 단속 돌입

'모 자치단체장은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다. 모 자치단체장 공천에는 여성을 전략공천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 관련 근거없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하면서 경찰도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9일 광주·전남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각각 내년 3월 9일과 6월 1일 예정된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단속을 시행한다.

광주경찰청은 5개 경찰서에 55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관련 첩보 수집 및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경찰청도 2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전담반을 구성하고 관련 수사에 나선다.

경찰은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은 불법 행위자 뿐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 지시한 자에 대한 수사와 선거 관련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내년은 대통령·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출 대가 명목 돈 받은 금융기관 직원
4개월 뒤 반환했다면 추징금 누구에게?

"받은 돈과 돌려준 돈 상태 달라"
은행 직원에게 1000만원 추징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 대가 명목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1000만원을 받았다가 4개월 뒤 반환했다면 추징금은 돈을 돌려받은 사람에게 받아야 할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71)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모 은행 팀장이던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기업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부동산임대사업자인 B씨에게 68억원대 대출 업무를 처리해 주고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는 돈이며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기것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받은 돈 1000만원을 그대로 반환했으니 추징을 해야한다면 돈을 돌려받은 B씨에게 해야 한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받은 1000만원을 4개월 동안 차 안에 보관하다가 돌려줬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5만원권 100장씩 두 묶음 들어있는 현금봉투가 담긴 쇼핑백'을 준 것과 돌려받을 당시 현금 봉투와 묶여있는 돈 상태가 달랐다는 B씨의 진술, 돈을 돌려준 날 A씨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점 등을 들어 '교부금품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수재자가 받은 돈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증재자로부터 몰수·추징해야 하고 수새자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판례도 인용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윤석열 후보 광주방문 반대" 9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지역 시민단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광주 방문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윤석열 후보, 5·18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라"

오월단체, 광주 방문 앞두고 요구

오월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장자회)와 5·18기념재단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광주방문(11월 10일)을 앞두고 윤 후보에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다.

9일 오월단체 등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광주방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사죄의 진정성을 보이고, 5·18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방문 전까지 윤 후보의 답변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답변이 없다면 윤 후보에 대한 강경한 반응을 내보일 전망이다.

단체는 윤 후보에게 성명을 통해 "광주에 와서 시민들과 5·18에 사과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사과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과하시겠습니까?" 등의 답변을 요구했다.

단체는 "윤후보의 '전두환 옹호발언'과 '개사과'에 대해 분노했다"면서 "5·18이 정쟁과 특정정치인들의 소모적인 도구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유족회장은 "그동안의 윤후보의 행동을 보면 5·18에 대한 진정성은 없고 단순한 정치적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윤후보의 방문에서 일말의 물리적대응이 있다면 오히려 정쟁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성숙하고 단호한 반대 입장 표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